

“친정, 어려운 살림 잘 알아...현안사업 꼭 챙기겠다”

광주시·전남도-더민주 정책 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일 광주시와 전남도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내년도 국회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사업과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당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민주 “친정 현안사업 챙기겠다”=이날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열린 더민주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 등 더민주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호남의 ‘따금한 회초리’가 보약이 됐다”면서 “광주는 (정치적) 친정인 만큼 내 지역구 챙기듯 현안사업을 꼭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발언은 뒷받침 호남에서 총선 패배 이후 쉽게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우 원내대표는 “평소에 잘해서 더 많은 예산을 따오고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민심을 잡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총선에서의 리를 보약삼아 더민주와 광주가 더 끈끈한 관계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당에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를 호남 출신으로 앉힌 이유도 모두 이러한 이유”라며 “광주와 전남의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방예산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방정부 예산 불균형이 심각하데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국가지원과 함께 시내 면세점의 경우 참석하 4명의 의원 중 3명이 소속 상임위원 만큼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살림이 넉넉지 않은 친정집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광주를 대하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문화전당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가 광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 분야를 살뜰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당 차원에서 논의키로=광주시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제조업 위기극복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더민주 차원에서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에 설명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광주형 일자리’가 국내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구상과 노력이 담겨있는 것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당 차원에서 논의

“지방 불균형 예산 바로 잡아야”

자동차 100만대·군공항 이전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 요청

그는 이어 “지방정부와 정당이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보겠다는 생각이다”면서 “운 시장으로부터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듣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더민주와 광주시 간 추가적인 논의를 갖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윤 시장은 “지방정부가 나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성심성의껏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구상한 것이 광주형 일자리다”고 소개했다.

윤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리 시대 최대의 문제인 사회적 격차를 줄여갈 것인지에 대해 정책과 논리를 잘 만드는 등 광주가 잘 준비하겠다”며 더민주당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더민주 광주시당은 이날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명칭을 남구 에너지 산업단지로 변경해줄 것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 대 양여방식을 특별회계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무안공항 활성화 강한 의지=전남도는 이날 더민주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전남도청이 아닌 무안공항에서 열었다. 이는 전남도가 더민주에 공항 활주로 연장과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등 지역현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전남은 조선업, 석유화학, 철강 등 3대 주력산업이 사양화 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종합대상과 출산을 1위, 관광객 증가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장 긴급한 현안인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회의 장소를 무안공항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무엇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조기 확정과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이 가장 긴급한 전남도의 현안”이라며 “이를 당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양항 석유화학 돌핀시설 건설,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수송기기술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 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겠다”며 “특히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를 이 지역 출신으로 선출한 만큼 지금까지의 차별이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잘 해 봅시다”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에서 열린 ‘2016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앞서 담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 우상호 원내대표,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나명주기자 mjna@

고마워요 몸~빠

이이잉

단풍나무 수액으로 진하고 부드러운 메이플 소주

새 잎새가 돋았습니다

당 다르다고 정책협의회 참석 말라고?

더민주,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장 불참 요청 해프닝

2일 열린 광주시와 더민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당 소속인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의 참석 여부 등을 놓고 일부에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 더민주 측은 국민의당 소속인 이 의장의 참석을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비롯됐다.

이날 광주시는 그동안 ‘야(野) 시대’의 관례대로 윤 시장 자리 옆에 시의장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더민주 측에선 국민의당 소속인 이 의장이 당정 협의에 참석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당 소속인 조세철 부의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더민주 측은 이 의장에게도 직접 전화해 불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일로 예정된 국민의당과 광주시의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이

의장이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전달됐다.

하지만, 이 의장은 “국민의당 의장이 아닌 시의회 의장으로서 참석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대표인 의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참석을 강행했다.

시는 더민주 측의 요구와 이 의장의 참석 강행 의지에 당황했고, 결국 이 의장이 인사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프닝은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시의회가 일당 체제이다 보니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당이 나뉘고 보니 의전에 상당한 혼란이 있다”면서 “하지만, 굳이 시의회 의장을 참석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제1당으로서 할일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8·15특사 경제인 최소화·정치인 배제 ‘가닥’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 생계형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경제인 및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최소화 내지 배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청와대는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정치권 사면 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의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대내외 경제위기’를 사면 배경으로 직접 언급한 만큼 중소기업인 외에 재계 인사들도 일부 사면 또는 복권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재계 총수들의 사생활을 둘러싼 스캔들 등 민심 악화에 따라 그 폭은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는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정치인이나 선거 사범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막판 일부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11~12일을 전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 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사면·복권 기준과 대상자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